

2022.12.08.(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우원식 의원실) 010-9254-9137

## 양당 지도부께 을을 위한 5대 민생필수 예산의 증액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목) 11:40, 국회 소통관

여야는 올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의 원내대표단이 나서 기존 국회 예결산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업의 예산에 대한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대립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목숨줄'같은 예산이 '정쟁'이란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안에 대폭 삭감된 민생 필수 예산을 이른바 '이재명 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여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예산'이란 용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치적 공격입니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없다면 현재 경제위기 속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생존예산'을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의 예산일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대구매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약속한 홍준표 시장의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협상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에 내년도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라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지역 화폐 예산은 7,000억원을 증액해 전년도 수준으로 발행되도록 해야 합니

다. 지역화폐예산은 기존 골목상권을 지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의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1석 2조 예산입니다. 정부여당이 지자체 자율을 주장하지만, 정부의 국비가 마중물이 되지 않으면 지역화폐는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소상공인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당의 지자체 단체장들도 지역화폐 예산을 환영하고 있음을 적극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혹한의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별금융 5,000억원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코로나의 고통으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리가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지원이 삭감된 정부안으로는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칫 폐업과 고리 사채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겨우 안정을 찾은 공공부문의 공무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수당의 순차적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차별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동인권적 측면에서라도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 집행계획을 담은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할 때입니다.

넷째,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의 현실화를 위한 1,1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이제는 돌봄노동자들의 저임금과 희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을 이번 예산 협상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라이더공제조합 설립’지원 예산 20억원 반영으로 플랫폼 종사자에 희망을 주고,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교환하는 형태가 우리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보편화되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배달플랫폼 기업과 라이더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공제조합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호망을 만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도 함께 동참하여 이러한 사례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여야지도부에 요구하는 필수 민생예산은 지난 시기 민생현장을 다니며 만난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담긴 것들이고, 여야 예산협상의 거대한 담론 속에 자칫 잊혀질 수 있는“을중의 을”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예산입니다. 민생 문제 만큼은 정략적 계산이 아닌 ‘흑묘백묘’의 자세로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타협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2022. 12. 8.(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